朴대통령 주내 내각·靑 개편 단행할 듯

‘중폭 개각’ 전망 속 경제팀 전면 교체 유력

김기춘 유임 가능성… 靑 수석 입각·교체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이번 주 중에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6~21일로 예정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에 단행하는 방식으로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순방 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사실상 국정공백 상황이 지속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개혁과 규제혁파, 경제혁신 등 국정현안의 추진도 올스톱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기 내각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개각은 7~8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될 전망이다.

우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의 전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의원의 발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역시 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제관료 출신인 이한구 의원도 거론된다. 또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문화·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 장관에 누가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보수성향 인사의 발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장무 전 서울대총장, 정갑영 연세대총장 등 학계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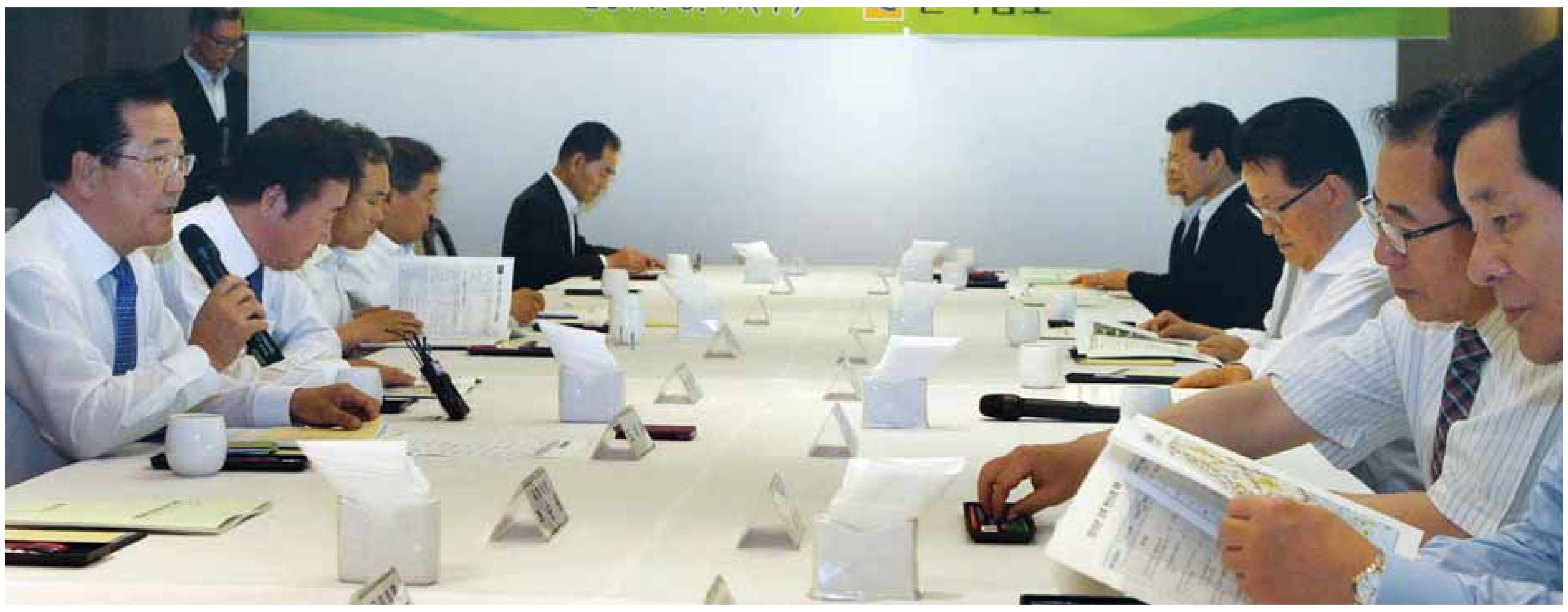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장관이 모두 바뀐 만큼 외교장관과 통일장관 등 다른 외교안보팀 각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새로운 수장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최소 규모의 교체도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유임과 교체 전망이 엇갈린다. 교체될 경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후임으로 거명된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창업공신’ 격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물러나면서 수석은 누구도 교체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개각을 앞두고 일부 수석은 입각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자연스레 청와대 개편도 큰 폭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입각설이 나오는 조 수석을 비롯한 원년멤버 가운데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중 일부는 교체되거나 입각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고 요청사업 협조 좀 해주세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당선자는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도정 주요현안과 국고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김성곤, 배기운, 우윤근, 황주홍, 김영록, 이윤석 의원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6~7월 인사청문회 ‘러시’… 하한 정국 뜨겁다

총리후보자 등 10여개 예상

여야 “철저 검증” 속 신경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개편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렛대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선으로 11일 현재 3개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간에 오는 23~24일 중 하루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라인의 전면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안전행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교체론도 제기돼온 만큼, 많게는 10개 안팎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인사 청문화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셈법은 서로 달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7·30 재보선 목전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 시리즈에서 ‘송곳 검증’ 공세로 일부 부적격 인사의 ‘낙마’ 성과를 일궈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신상털이’식 무차별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 후보자 ‘방어’에 최대 주안점을 두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여권의 7·14 전당대회, 세월호 국정조사, 7·30 재보선 등의 일정이 겹쳐 여야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다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어 국민적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부실 청문회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재육성’ 호남미래포럼 사단법인 등록

초대 이사회 대표 한갑수

호남 인재 육성을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이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정식 발족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미래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테헤란로 호남미래포럼 사무실에서 사단법인화 이후 호남미래포럼의 정책운용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이사회와 대표단 간담회에는 초대 이사회 대표로 추대된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박경서 전 유엔인권대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주섭 전 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사회 대표인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과 포럼운영을 총괄집행하는 상임운영위원인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투톱체제로 운영된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은 포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고문 역할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장성 등 52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

나주와 장성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50여 개 마을 주민들이 30년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전남도는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역인 나주 21곳과 장성 31곳 등 모두 52곳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연말 안에 이 마을들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1종)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장성은 장성읍 진원면 율곡마을 등 1052가구, 나주는 남평읍 작수마을 등 761가구가 대상으로 면적은 0.42㎢(42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 연립주택 건립, 슈퍼마켓 등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전남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담양 108.68㎢, 장성 81.77㎢, 화순 41.23㎢, 나주 39.54㎢ 등 모두 271.21㎢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93㎢를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90㎢가 해제됐으며 남은 면적은 11.03㎢다.

전남도는 또 하천이나 철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토지와 한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나뉜 곳 등 1400여필지, 0.33㎢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10.28㎢는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개발 등 추가 개발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평향교 배임의혹’ 공무원 문책하라”

광주 경실련 촉구

“토지 매각 수십억 손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창평향교 재산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이 발생했다며 전남도와 향교집행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창평향교에서 부실한 재산 관리감독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남도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전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서를 함께 발표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평향교는 소유토지 3443평(공시지가 평당 약 23만 원, 거래시가 평당 약 50만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17억 상당의 토지를 평당 20만원에 매각, 약 1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유림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 813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실거래가보다 두배가량 비싼 금액(평당 50만원)으로 사들여 약 2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 관리·감독권이 있는 전라남도 향교재단은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익금 6000여만원을 받고 재산처분을 허용해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창평향교 집행부는 내부고발에 따라 담양경찰서에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허가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창평향교가 허가받은 이후 토지 처분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